



【검토보고서】

2018. 04.16.(월)
제 291 회 임시회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최상열】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보건사업과장)
- 제출일 : 2018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상위법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7. 5. 30.)으로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칭 변경
 -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 (제2조제1항)
 -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 (제3조제3호)
 -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 (제4조제1항)
-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입법예고 : 2018. 2. 23. ~ 3. 15. (20일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의 개정 취지

- 개정안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2014년 4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근거 법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등에 대한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종전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

◇ 주요 내용

-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

나.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현황

○ 명칭(위치) :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양주시 삼승로 61번길 10)

○ 운영방식 : 위탁운영

구분	선정방법	위탁액(천원)	센터인력(명)
2013년	3년 공개경쟁, 계약	484,668	11
2014년		495,832	11
2015년		510,832	11
2016년	3년 재계약	613,844	12
2017년		651,993	14
2018년		711,700	14

○ 위탁기간 및 기관

- 2008.10.7. ~ 2012.12.31. 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
- 2013. 1.1. ~ 2018.12.31. 성람재단 송추정신병원(운영중)

○ 운영인력 : 1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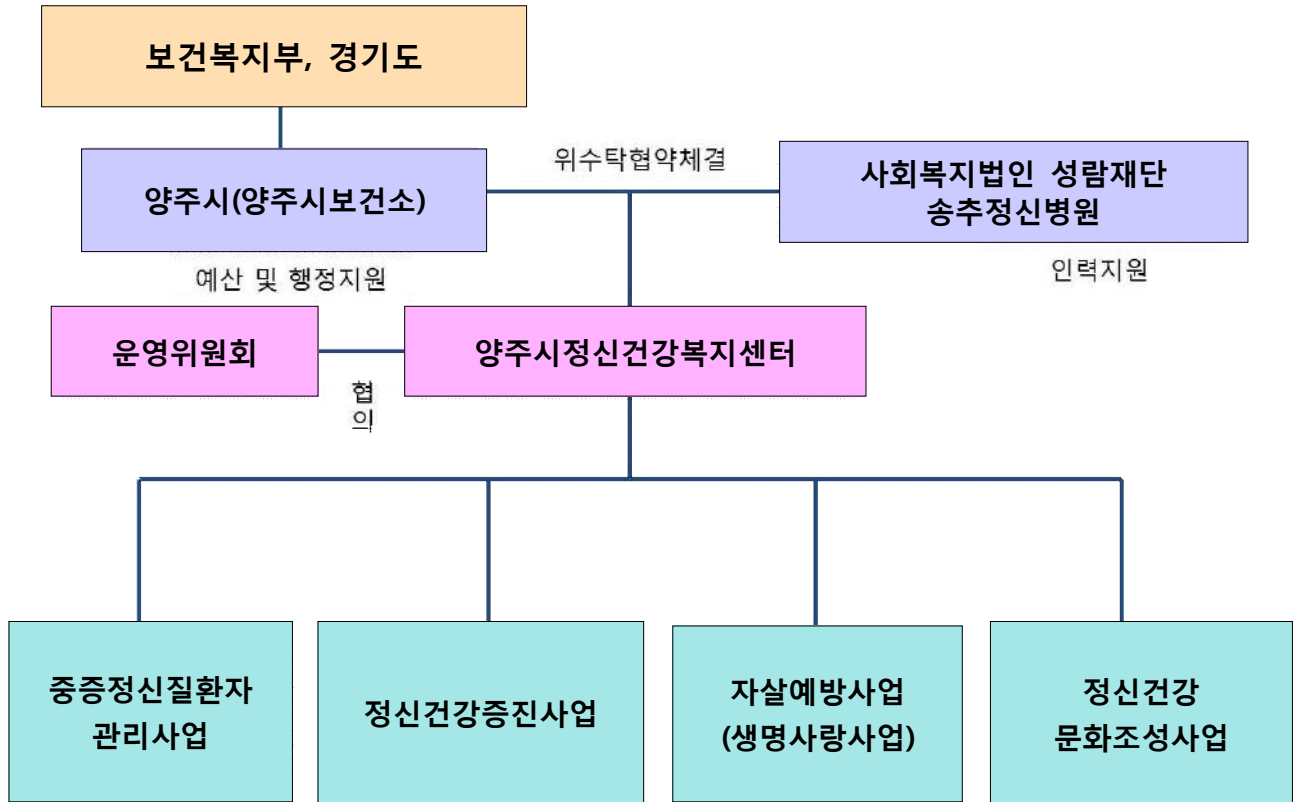
※ 센터장 1(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8명(정신보건간호사 6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인),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 사업대상

(2017.10.31.기준)

사업대상군	사업대상	추정대상자수	비고
일반인구	일반주민	211,323명 (양주시 전체 인구)	시민전체
위험인구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 주민	14,313명 (니코틴사용장애 제외 모든 정신장애)	성인 인구의 (명)의 10.2%
표적인구	중증 정신질환자	1,431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대상자수)	성인 인구의 1%
등록관리	등록 정신질환자	518명 (전체 등록자수)	성인등록자 359명

○ 센터 운영체계



○ 주요사업

주요사업	사업내용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사례관리, 주간재활, 직업재활, 가족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 사례관리,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교육 등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교육, 번개탄판매개선캠페인, 우울증 검진, 농약보관함보급 등
정신건강문화조성사업	정신건강인식개선캠페인, 전문인력교육 등

다. 주요 개정 내용

㉡ 조례의 구성 체계

현 행		개 정안		비 고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수정
제2조	정의			삭제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수정
제4조	사업	제3조	사업	수정
제5조	인력	제4조	인력	수정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수정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정
제8조	위탁의 취소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수정
제9조	지도·감독			삭제
제10조	이용제한	제8조	이용제한	수정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제13조	운영위원회 회의			삭제
제14조	수당 등 지급			삭제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제9조	관계법령등의 적용	신설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부칙	시행일	

2)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 제명 및 명칭 등의 용어 정비

- 조례제명 : (현행)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명칭 및 용어 :
 - ※ 정신보건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 조례 목적 조항의 근거 법률 조항 등 정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계 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센터의 명칭 및 위치 (안 제2조)

- 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로 하고, 위치는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위치는 양주시 삼승로 61번길 10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한다.</p> <p>② 센터는 양주시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양주시 지역 내에서 시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편리한 곳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p>

4) 센터의 사업 (안 제3조)

-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법 제7조의 3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사업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제13조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3.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p>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관련법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센터장 임명 등 인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센터를 시가 직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탁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 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 정비함.

현행	개정안
<p>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u>정신보건전문요원</u>, 그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센터의 장은 <u>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u></p>	<p>제4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p> <p>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u>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u></p>

6)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안 제5조 ~ 안 제7조)

- 센터는 시장이 (직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 운영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불합리하고 또는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 정비함.

현행	개정안
<p>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u>운영한다</u>.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u>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u></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u>관리·운영한다</u>.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u>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u></p>

<p>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p> <p>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관리·운영의 위탁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2항 ~ 제5항 삭제></p>
<p>제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3. 수탁자는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p> <p>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에 따른 계약서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p> <p>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p>	<p>제6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p> <p>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p> <p>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p> <p><제3호 ~ 제4호 삭제></p> <p>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p>
<p>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p>	<p>제7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p>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등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 삭제>
---	--

※ 법령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제6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7) 이용제한 (안 제8조)

○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문정비

현행	개정안
<p>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p>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p> <p>2. <u>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 사용에 따른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3.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p>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p> <p>2. <u>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u></p> <p>3. <u>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u></p> <p>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8) 관계법령 등의 적용 (안 제9조)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지침 등을 따르도록 함.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9)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법정사항이 아니고, 단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필요시 시장이 규칙으로 제정이 가능하여 이를 삭제함.

※ 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 계획 검토 2.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양주시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따른 협의 	<p><삭 제></p>
<p>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의 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2. 사회복지시설의 장, 정신보건센터의 팀장, 그 밖의 사업관계자등 	<p><삭 제></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③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4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2018년 제1차 의정협의회 (2018.1.10.)에서 제시된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음.

마. 의정협의회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명시한 제1조 목적 조항은 법적 타당성이 없고,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전면 수정 의견을 제시함.

※ 의견 반영 내용

의정협 의안	개 정 안 (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u>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법정사항 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정신건강센터 사업과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 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현행 조례 제11조~제15조) 삭제 의견에 대해 이를 반영함.